

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	<h1>보도자료</h1>	2016. 3. 2(수)	
		작 성 . 문 의	경제실 과학기술미래정책과 과장 김영문 / 사무관 서효원 (Tel. 044-200-2226)
엠바고	3월2일 15시 30분(행사종료) 이후 사용		

사이버 테러에 “민·관·군이 협력하여 철저 대비”

- 황 총리 한국인터넷진흥원 방문, 사이버 테러 대비 태세 점검

□ 황교안 국무총리는 3월 2일 사이버 보안의 최전선을 지키는 인터넷침해대응센터(한국인터넷진흥원)를 찾아 사이버 테러 대비 상황을 점검하였다.

○ 점검에 앞서 북한의 사이버 테러 도발 우려에 대해 전문가 간담회*를 개최하였다.

* (참석) 백기승 인터넷진흥원장, 황승구 ETRI 초연결통신연구소장, 이임영 한국정보보호학회 회장, 이득춘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고문, 삼성카드·KT 정보보호최고책임자, 인포섹 대표, 국무2차장, 미래부 실장, 경찰청 차장 등

○ 이번 방문은, '16.2.11,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사이버 위기경보를 '주의' 단계*로 격상하여, 대응태세가 한층 강화된 엄중한 상황에서 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* 사이버위기경보 : 정상 → 관심 → 주의 → 경계 → 심각

- 황 총리는 이 자리에서 최근 북한의 공공·통신·금융 등 부문별 사이버테러 위협 동향과 24시간 비상대응 현황을 보고받고, 산학연 정보보안 전문가와 사이버테러에 대한 민관 공동 대응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.
- 이철성 경찰청 차장은 지난 1월 북한 핵실험 이후 청와대와 외교부 등을 사칭한 메일이 북한이 유포한 악성 메일이라고 하면서, 최근의 북한의 사이버테러 위협 동향과 정부의 대응현황을 보고하였다.
- 백기승 인터넷진흥원장은 인터넷 이상 징후 24시간 모니터링, 악성코드 점검, 해킹·디도스 탐지 및 대응, 사이버 경고 발령 등 인터넷 침해대응 현황 전반에 대해 보고하였다
- 산학연 전문가들은 국경도 없고 순식간에 피해가 확산되는 사이버 공격과 사회불안을 조장하는 최근의 심리전 양상 등을 감안할 때,
 - 공공·민간·군이 협력하여 골든타임 안에 탐지·차단·복구를 수행하는 것이 성공적인 대응의 관건이라고 입을 모으며,
 - 이를 위하여 사이버 방위산업인 정보보호 산업의 전략적 육성,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.
- 황 총리는 “정부는 ‘14년말 한수원 해킹사고를 계기로 「사이버 안보태세 강화 종합대책」을 마련하였다”고 밝히면서,

○ 사이버 테러는 “단기간 큰 피해를 야기하고, 국민과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인 만큼, 민·관·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신속히 대처해 줄 것”을 주문하였다.

* 과거 발생한 농협전산망 장애나 한수원 해킹 등과 같은 사이버위협은 국민 생활과 국가경제 전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를 중대하게 위협하는 것임

○ 아울러, 우리 국민 개개인이 PC나 스마트폰에 최신 백신을 설치·업데이트하고, 의심스러운 메일이나 문자는 열람하지 않는 등 생활 속에서 사이버보안을 실천하기를 당부하였다.

□ 황 총리는 간담회 종료 후 인터넷침해대응센터 종합상황실에서 침해사고 모니터링, 대응현장 등을 살펴보고 비상대응반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였다.

○ 한편, 황 총리는 금년 들어 1월 30일(토) 인천공항을 찾아 공항 보안 및 테러 방지 강화를 지시한 바 있으며,

○ 향후에도 사이버 테러 도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안보 관련 행보를 지속 이어갈 예정이다.

※ 첨부 : 北 도발과 사이버 위협 추이

참고

北 도발과 사이버 위협 추이

- 북한은 핵실험 등 주요 도발 후,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도발
- 특히, 핵실험후 1~4개월 이내 대규모 사이버 공격 발생
 - 2차 핵실험('09년 5월) → 7.7 DDoS(2개월 後)
 - 3차 핵실험('13년 2월) → 3.20(1개월 後), 6.25(4개월 後)

